

① 인문사회분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적용 사례조사(작성자:김지수 위원)

2005년 생명윤리법이 통과된 후, 국내에서는 연구 윤리를 증진하고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계획 및 수행 단계에서 조사·감독을 수행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근래에는 법률이 규정하는 ‘인간대상연구’를 하는 인문사회과학 분야 연구자라면 누구나 IRB 심의를 거치게끔 대학·저널·학회 단위로 그 시스템이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 수행에 있어 IRB 승인이 거의 필수적인 절차로 제도화된 반면 그 심의기준과 적실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 및 한계가 지적된다. 많은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들이 심의단계에서 자신의 전공에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연구절차나 방법론의 방향과 충돌을 겪고 있다. 당초 의·생명과학에 근거한 연구윤리를 중심으로 구성된 IRB의 심사기준이 그 시행 취지와 달리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방식으로 적용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인문사회 분야에서 IRB 심의가 현재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심의절차에서 드러나는 구체적 문제는 무엇인지 사례를 조사하여, 현재 인문사회계열 연구윤리 제도와 관련해 어떤 문제들이 존재하고 어떤 논의가 필요한지를 종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제도화를 거치며 확장되는 IRB의 적용 현황과 한계를 인문사회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연구윤리 문제에 대한 인문사회 연구자 공동체의 공론 형성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인문사회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발전 방안이나 인문사회 분야에 적합한 IRB 심사 기준에 대한 정책적 제언으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② 인구소멸 시대 다문화 사회 인식 연구(작성자:강희정 위원)

한국으로의 노동이주, 결혼이주가 증가하면서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어엿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단일민족 중심의 사고에 머물러 있다. 한류

로 인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날로 증대되고, 디지털세계의 초연결로 세계화란 말조차 무색해진 현재, 한국 사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공존과 통합을 위한 인문학적 성찰이 요구된다. 인구가 줄어들고, 청년세대가 적어지면 나라의 노화를 피할 수 없다. 다문화 가정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충분한 포용정책과 교육을 하고 있지 못하다. 공동체의 기본 단위가 되는 가정의 다문화를 교육 현장과 사회에서 수용하고, 통합할 수 있는 시민정신을 키워 한국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 나갈 기반을 닦는 것이 시급한 당면 과제이다. 다문화주의, 혹은 상호문화주의를 기본 바탕에 두는 적극적이고, 장기적·체계적인 인문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③ 문화예술 분야 인문정책 현황과 과제 (작성자:양현미 위원)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22-2026)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인문학, 문화체육관광부는 인문정신문화를 담당한다. 문체부 인문정신문화 정책은 인문학 대중화를 위한 문화자원(문화시설, 문화콘텐츠 등)의 활용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문체부가 관장하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가 인문학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인문정책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 인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인문정책의 지형을 살펴보고 이를 재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 문화예술 분야는 문학, 미술, 공예, 디자인, 국악, 음악, 무용, 연극,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등 예술, 콘텐츠, 문화재를 포함하는 것이며, 정책분석 범위는 교육부와 문체부, 문체부에서는 문화예술정책, 콘텐츠산업정책, 문화재정책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 분야 인문정책 현황과 과제는 다음 일곱 가지 질문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1) 문화예술 분야는 인문학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2) 문화예술 분야는 인문정책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인문학을 위해 문화예술 활용, 문화예술을 위해 관련 인문학 육성 등) (3) 문화예술 분야 인문정책 영역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4) 미래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문화예술 분야 인문정책 영역으로

향후 강화되거나 신설되어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 (5) 문화예술 분야 인문정책은 현재 어떤 정책영역에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엇이 부족한가, (6) 해외에서는 문화예술 분야 인문정책의 어떻게 하고 있는가, 벤치마킹할 사례는 무엇인가, (7) 2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에서 문화예술 분야 인문정책으로 보완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이다.

④ 전쟁(난민)의 인문학적 문제 해결에 관한 연구(작성자:조경란 위원)

전쟁은 인류 역사와 함께 해왔다. 따라서 우리의 인문적 삶의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중심 과제이다. 최근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실제로 에너지, 식량 등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주어 전쟁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쟁이 가져올 파장이다. 미국 패권의 약화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세계의 구조적 불안정이 미중 신냉전의 형태로 강화되고 있으며, 이 불안정은 갈등이 상존하는 한반도 문제, 양안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전쟁은 승리자가 있을 수 없고 정도의 차이만 있지 모두 패배자가 된다”는 보편적 명제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제정치는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 그동안 전쟁은 주로 정치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다루어졌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과 삶의 조건을 근본부터 빼앗고 파괴한다는 점에서 전쟁은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에서부터 부정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코로나19의 지구적 대유행이 이제까지의 삶의 방식을 근본에서 다시 묻게 만드는 것처럼, 정보기술과 전쟁무기의 비약적인 발전이 완전히 양상을 뒤바꾸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도 정치철학을 포함한 새로운 인문학적 접근이 절실하다.